

大學新聞의 編輯權 갈등

康 俊 晚

(全北大 新聞放送學科)

대학신문의 編輯權 갈등은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학교당국도 신문제작을 '教育의 연장'으로만 이해하는 고압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학신문의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된 協議體와 학생들의 輿論을 중심으로 한 '市場機能'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기본 統制方式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1. 問題提起

대학신문은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89학년도 1학기 현재 122개 대학에서 모두 250만 부가 발행되고 있다. 이러한 발행 규모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차지하는 독특한 位相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학신문이 대단히 중요한 媒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대학신문의 編輯權을 둘러싸고 정부·학교당국·학생들 간에 끊임없는 葛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신문은 學術的 研究의 대상으로서는 거의 의면되어 오다시피 했다. 정기적으로 대학신문주간교수협회의 연례 세미나에서 主幹教授들의 '行政的 立場'을 밝힌 보고서들이 발표되어 온 것이 고작이었다. 그밖에 외국 대학신문과의 비교연구 또는 매우 추상적인 원론만을 제시한 논문들이 그것도 아주 드물게 발표되었을 뿐 대학신문의

편집권 갈등이라는 현실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들은 거의 발표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임에 틀림없지만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대학신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한국 사회에서 大學이 차지하는 位相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적어도 대학신문에 관한 한 외국의 이론이나 경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어느 나라의 대학도 한국의 대학처럼 매우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옳든 그르든 좋든 싫든 간에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대학생들이 이른바 民主化의 핵심 세력이었다. 오늘날 그 민주화를 어떻게 정의하든 이미 政治勢力化된 대학생들의 時局觀이 여전히 한국 정치의 주요 변수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신문은 歷史의 산물이다. 대학신문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바람직하건 바람직하지 않건 대학생들의 간접적인 정치참여가 정치권의 無能 또

는 不義에 의해 '허용' 되고 기정사실화되어 온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학신문만을 따로 떼 내 그에 관한 '象牙塔'의 교과서적 당위론을 역설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학자들이 대학신문을 심각한 研究主題로 삼길 꺼려하는 주요 이유이다.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늘 존재하는 것이지만, 대학신문의 경우에는 학술적 주제로서의 가치가 부정당할 만큼 그 괴리가 엄청나게 크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이해를 전제로 하여 여기에서는 대학신문 編輯權 갈등의 주요 내용과 爭點을 살펴 보고, 그 갈등해소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編輯權 葛藤의 內容

대학신문의 편집권 갈등이 사회적으로 可視化된 것은 '89년 5월 문교부의 이른바 '5·6조치' 이후부터였다. 이 조치는 그 이전에 학교당국과 학생기자들 사이에 표출되었던 학교 내부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5·6조치의 실행이 물고 울 파장을 우려해 곧 학교당국의 統制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며, 그와 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학의 自律性을 무시하고 게다가 뚜렷한 원칙도 없이 時局狀況에 부화뇌동하는 정부의 그런 태도는 대학신문의 통제가 '教育的'이라기보다는 '政治的'인 관점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대학신문의 편집권 갈등해소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5·6조치 이후 대학신문 편집권 갈등의 주요 내용들을 <표 1>을 통해 살펴본 후 갈등의 爭點 몇 가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표 1> 대학신문 편집권 갈등 주요 일지

일 시	주 요 내 용
'89. 5. 6	문교부는 전국 35개 대학 총·학장회의에서 "총·학장 명의로 돼 있는 발행·편집인 명의를 학생들로 바꿔 좌경화·체제부정 등으로 실정법을 어길 경우 학생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 (이 조치 이후 7~8월에만도 대학신문 기사와 관

일 시	주 요 내 용
	련, 학생 1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됨)
'89. 5. 9	전국 97개 대학신문사가 가입해 있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는 중앙대에서 비상 상임위원회를 열고 문교부 조치에 대해 항해 공동으로 부쟁해 나갈 것을 결의
'89. 5. 14	'서울지역교지편집인연합회', '서울지역영자신문연합회', '경인지역대학방송연합회', '서울지역대학언론취의회건설준비위원회' 등 대학언론 관련단체들도 각각 대책회의를 갖고 한양대에 모여 '대학언론탄압분쇄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89. 5. 24	전국의 대학신문·방송기자·교지편집인 등 대학신문 관계 학생 1천 여 명은 서강대에 모여 '고 이철규 민족민주 언론열사 추모식 및 대학언론출판 탄압규탄대회'를 갖고 문교부에 항의방문단을 파견
'89. 7. 7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전국대학 학생처장협의회에서 대학언론이 운동권의 선전지로 전락, 학생들을 사상적으로 오도하고 있다면서 신문·교지·대자보나 불법기관지 등 대학매체에 대해 강력한 지도대책을 확립해 줄 것을 당부
'89. 7. 22	고대신문의 학생기자들이 대학전을 광고 대행업체 우남에이전시의 광고의 걸을 문제 재삼아 우남의 광고 대신 기회광고를 신자주간교수가 제작중지 조치를 취할(11월 14일 학생기자들이 광고계약문제를 포함한 고대신문 운영권과 편집권에 있어서 주간교수의 지도권에 동의함에 따라 발행중지)
'89. 8. 31	경북대신문은 4 편의 원고가 주간교수에 의해 수정되자 학생기자들의 반발로 발행중지
'89. 10. 25	수원대학보는 주간교수가 기사내용을 이유로 제작연기를 결정함에 따라 발행중지
'90. 1. 9	수원대는 학생기자들이 제작한 7개편을 삭제하고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제작한 신년특집호를 불태운 학보사 기자 3명에 대해 퇴학처분, 2명에 대해 무기정학처분
'90. 4. 27	전국대학신문주간교수협의회 춘계세미나에서 문교부의 대학신문 심의강화책 공개. 대학신문에 실리는 이념성 기사에 대해 평점을 매겨 下(2~4점)는 총·학장 경고,

일 시	주 요 내 용
	甲(4~6점)은 주간교수 경고, 乙(6~9점)은 신문편집장 구속
'90. 5. 16	고대신문 기자들은 주간교수의 결정으로 신문발행이 5차례나 중단되자 편집자출권 보장과 원고검열 철폐를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돌입
'90. 5. 29	'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과 '경인지구대학방송연합' 등 4개 대학언론단체 소속학생 2백여명은 고려대에서 "대학언론탄압분쇄를 위한 대학언론인 결의대회"를 갖고 대학언론 탄압에 맞서기 위해 '서울지역언론협의회'를 결성
'90. 5. 30	한국레앙대는 대학신문에 실린 기사물 문제삼아 기자 2명과 취재에 응한 학생 2명 등 4명을 중징계
'90. 8. 18	서울시경은 21개 대학간행물에 대한 일제수색 결과 용공 이적성이 강한 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필자와 학생기자 등 6명을 구속, 1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56명을 수배
'90. 8. 23	서울시내 23개 대학학보 및 교지기자 4백여명은 서강대에서 "대학언론탄압분쇄 및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 대회" 개최
'90. 11. 6	명지대 학교측의 기사검열 요구로 명대신문 발간중지
'91. 2. 25	서강대 학교측은 기사를 문제삼아 서강학보의 배포를 중지시키고 학생기자들의 "광고질서회복 캠페인"을 문제삼아 제작 중지
'91. 3. 7	'이사장 축사'를 신문에 게재하지 않다면 발행을 중단하라는 주간교수의 명령에 따라 성신여대 학보 발행 중단
'91. 3. 16	주간교수의 기사수정 요구로 한대신문 발행중단. 2주후 "주간교수는 편집간사(학생기자출신 대학원생)의 문제제기가 없을 경우 반드시 신문인쇄를 승인한다"는 데에 학교측이 합의함으로써 제작 재개
'91. 3. 27	주간교수의 기사수정 요구로 건대신문 제작중단(4월 10일 학교측의 학생주장 수용으로 발행재개)
'91. 4. 1	광운대는 학내 교수들로 '편집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면계획서 검열·수정권', '수습기자선발·일명권'을 주간교수에게

일 시	주 요 내 용
	넘기라는 요구가 학생들에 의해 거절되자 제작중단
'91. 4. 3	덕성여대신문은 학교측이 근거없는 내용, 학생선동, 허위보도, 좌경사상 유포 등에 대한 금지와 교수가 사설을 집필하고 주간교수가 수습기자를 선발한다는 6개 조항을 학생기자들이 거절하자 발간 중지(9월 2일 학생기자들이 사설의 교수집필, 허위사실 보도금지 등 5개항에 합의함으로써 재발간)
'91. 6. 7	교육부는 "대학구성원의 여론매체라는 제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대학신문은 발행전에 반드시 대학신문 주간교수의 검열을 거치도록 하여, 편집·발행권을 학교가 행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학내풍토 세신방안"을 발표
'91. 8. 16	승실대 학교측은 승실대신문 8면 중 4면을 학교측이 제작, 학교홍보와 학술논문 등을 게재하고 나머지 4면은 학생측이 제작하자는 1차안과 주간교수-전문위원의 사전검열을 요구한 2차안이 모두 학생기자에게 의해 거절되자 발간중지 결정
'91. 9. 2	한국의대 학교측은 외대학보의 사설집필에 교수-학생이 공동 참여하자는 안이 학생기자들에 의해 거절되자 발간중지 결정(10월 24일 학생기자들의 학교측 요구수용으로 재발간, 학생기자들은 논설 및 지도위원 선임에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철회)
'91. 9. 4	대학교육협의회는 각 대학에 서한을 보내 "학보·교지 등은 비록 학생 언론활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지도교수 또는 심사기구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장
'91. 10. 4	수원대는 "학보사 기자는 평균 학점이 3.5 이상이어야 한다"는 학교 내규에 따라 학보사 기자 8명 가운데 7명을 "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강제 해임
'91. 10. 17	세종학보가 9월 30일자에 북한 송도대학 조선어문학과 학생회로부터 받은 편지전문을 게재했다가 배포중지된 이후 학교측은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연말까지 발행중단 지시

3. 編輯權 葛藤의 爭點

1) 대학신문은 敎育의 연장인가

그간 대학신문의 편집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 중의 하나는 대학신문이 학교교육의 '延長'인가 하는 것이었다. 대체적으로 교육당국과 학교당국은 대학신문을 교육의 연장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 이 견해는 조선일보 '91년 9월 8일자 사설이 다음과 같이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대학신문의 기자들은 교수의 지도를 받고 학업을 연마하는 도중에 있는 학생들이다. 대학신문의 제작도 이러한 지도체제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학생들이 편집독립권을 내세워 교수의 지도를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교수와 학생 사이의 본질적인 지도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대학신문은 학생들이 제작하는 실습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지적하고 싶다.

그러나 대학신문이 학교교육의 연장이라는 견해는 학문 외적인 교육행정이나 기타 사항에 있어서 교육당국과 학교당국의 '무오류성'을 전제로 할 때에만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대학신문은 앞에 '대학'이 붙긴 했어도 엄연한 '신문'이므로 '교제'의 연장일 수는 없으며, 또 대학생들은 초·중·고교생들과는 달리 교육당국이나 학교당국의 오류를 批判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학생들이 문제삼아 교육당국과 학교당국의 오류가 시정된 것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든 학교당국과 교수들의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학신문이 '행정교수'들의 지도체제에 종속되어 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물론 대학신문이 학교교육의 연장이라는 일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적 측면은 부분적인 것이지 그것이 대학신문을 엄격한 統制 하에 놓이게 할 명분은 되지 못한다. 또 교육적 측면에서의 지도도 학생들이 가진 학술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 드러나는 문제들을 보완해 주는 것이어야지 교수들의 생각이나 思想的 偏向性을 강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運動圈의 대학신문 장악이 문제인가

교육당국과 학교당국의 대학신문 통제 의지는 현실적·근본적으로 이른바 '학생 운동권'이 대학신문을 장악했다고 보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성 언론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조선일보 '89년 5월 11일자 사설은 "대학신문들은 운동권의 논리와 주장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구실을 해왔으며, 심지어 북한의 주장이나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정당성을 과격한 용어와 편향된 개념과 조급한 과잉의식에 담아 비판·매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91년 9월 8일자 사설은 "싸움하는 소수'인 운동권이 제작을 독점하고 공정성과 균형감각을 상실한 채 이념투쟁에 지면을 거의 할애하고 그것만이 대학언론의 사명인양 호도해 온 것이 숨기지 못할 사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들의 타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당국과 학교당국이 대학신문의 편집권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 그 어떤 원칙보다는 단지 '운동권의 대학신문 장악'이라는 상황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 논법대로 한다면 교육당국과 학교당국이 설 論理的 立地는 그만큼 줄어들고 말 것이다.

생각해 보자. '70년대에는 대학신문이 '4·19'라는 단어조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건 어찌구무 없는 시절도 있었다. 일부 사립대의 대학신문들은 학교 홍보매체로 전락했으며, 대부분의 대학신문들이 오로지 대학내부의,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문제들만 다루도록 강요되었다. 대학생들의 학내시위 기사조차 단 한 줄도 언급할 수 없었던 1981년 어느 대학신문 기자들은 험거운 노력끝에 아주 짧게나마 최초로 보도한 시위 기사를 놓고 감격하여 서로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다.

교육당국과 학교당국은 과연 그런 시절의 대학신문의 모습이 바람직했다고 지금도 주장할 수 있을까? 1984년까지 대학캠퍼스 내에 상주하고 있던 보안사·안기부·경찰 등의 검열관들이 대학신문의 올바른 位相定立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 당시 철저히 침묵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대학신문 탄압에 앞장까지 섰던 교육당국과 학교당국이 이제 와서는 운동권이 대학신문을 장악했으니 대학신문을 통제해야겠다고 큰소리 치다니 道德的 說得力은 둘째치고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대학신문을 통제하고자 하는 교육당국·학교당국은 보다 더 명분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옳다.

3) 대학신문의 主體는 누구인가

대학신문의 편집권 갈등에 있어서 교육당국이나 학교당국의 주장 가운데 설득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은 대학신문의 主體에 관한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조선일보 '91년 9월 8일자 사설이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대학신문의 발행인은 총장이며 주간교수가 제작을 지도하게 되어 있고, 그 비용도 대부분 학교측의 예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대학의 신문'이지 외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생회나 기타 학생클럽이 발행하는 학생신문, 즉 student paper는 아니다. 따라서 대학신문은 교수와 학생사회의 학문적 연구결과나 대학문화의 발달 등에 관한 내용을 다양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주장을 다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으나, 대학신문의 주체가 대학생들만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는 異論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전국 대학신문기자연합회가 '89년 5월 10일 5·6조치에 항의해 발표한 성명도 대학신문의 주체에 대해 밝히고 있다.

각 대학별 토양 속에서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가꾸어 온 교수·직원·학생 등 모든 대학인의 대학신문을 학생신문으로 지위 격하시키겠다는 일방적 '저시'는 대학인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비민주적 발상이며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 및 교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임을 인정, 정식사과·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대학신문의 주체가 교수·직원·학생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대학신문의 제작을 학생들이 거의 전담하는 상황에서, 또 그것이 불가피하고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교

수와 직원의 '지분'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대학신문의 전반적인 편집권 갈등해소를 위해 이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4. 編輯權 葛藤解消을 위한 提言

1) 利害關係者 協議體 構成

교수·직원·학생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조직에 학생기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포함한 폭 넓은 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것으로, 특정 조직에 의한 任命보다는 추천방식을 병행하는 選舉制를 도입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인원을 선출토록 한다. 선거제가 매우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나, 현재 교육당국·학교당국과 학생들이 대학신문의 편집권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소모전'에 비하면 훨씬 '경제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2) '市場機能'을 보장할 制度的 裝置

대학신문의 극단적 이념 편향성이나 조잡성은 교육당국이나 학교당국보다는 전체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시장기능'에 의해 규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학생기자들은 교육당국·학교당국보다는 학생독자들로부터 대학신문이 배척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이른바 '매체혁신운동'으로 이어져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학생기자들은 '매체혁신'을 기하기 위해 편집방침을 ① 우선 大學人에게 읽혀져야 한다, ② 외부 필자에 의한 論文 위주의 제작방식을 지양하고 기자들이 발로 쓰는 글의 비중을 늘린다, ③ 거창한 주제, 정치 일변도보다는 주위의 생활적 소재로 본질에 접근한다, ④ 학생대중의 요구와 수준을 반영하고 독자의 참여 폭을 넓힌다, ⑤ 모니터 통신인, 편집위원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전 대학인의 신문이 되도록 한다 등으로 설정하고 현실화하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비교적 동질적 성원으로 구성된 대학사회에 있어서만큼은 '시장기능'이 최상의 통제장치라고 하는 사실을 교육당국·학교당국은 깊이 깨

달아야 할 것이다.

‘시장기능’의 보장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는 학생들의 輿論을 수시로 확인하고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대가 이미 '8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음부즈만제’를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중앙대는 대학신문과 관련된 교수 2명, 대학원생·학부생 각 1명씩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사를 심의하고 있는데, 평가위원회 구성방식의 公正性만 보장되면 이 방식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3) ‘명백하고 현존하는 危險의 原則’의 존중

대학신문의 편집권 갈등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의사가 있고, 국가의 이익과 안보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기사들에 대해서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을 적용할 의지만 있다면 그 대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정부가 지식습득 이상으로 중요한 대학의 기능이 批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대학신문의 편집권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대학신문이 갖고 있는 ‘비판기능’의 성숙을

위한 방안은 얼마든지 대학 내에서 교수와 학생들 간의 對話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며, 정부가 직접 개입할 성격의 일은 아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총체적 부패구조’를 비롯한 모든 모순과 비리를 척결하는 일대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대학신문이 자연스럽게 학내 문제에 진범할 수 있도록 정치사회적 토양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

<參考文獻>

- 강영진, “대학언론, 좌경이념의 온상인가”, 「신동아」, '89년 7월호, pp. 414~28.
- 강호수, “대학신문의 현실과 바람직한 위상”, 월간「신문과 방송」, '90년 7월호, pp. 44~49.
- 김경희, “방북추진, 대학신문의 결과 속”, 「월간 중앙」, '91년 8월호, pp. 392~405.
- 박준영, “대학언론의 매체혁신운동”, 월간「달」, '90년 8월호, pp. 162~65.
- 서종훈, “대학신문은 선동매체인가”, 「월간 조선」, '89년 7월호, pp. 264~76.
- 황의봉, “대학언론으로 본 대학의 실상”, 「신동아」, '85년 10월호, pp. 440~63.